

‘하나의 경제권’ 통합특별시, 반도체 밸리 꿈꾼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설비 투자 지역으로 전남광주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 구상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기업의 지방 투자와 함께 정부의 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저렴한 부지, 인력 등을 보유한 전남광주가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재편으로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생태계를 광주-부산-구미 남부권으로 확장하는 ‘남부권 반도체 혁신 벨트’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패키징 등 유망 분야를 지역 여건에 맞게 ‘특화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기존 클러스터(수도권)와 연계한 반도체 네트워크를 전국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는 첨단 패키징, 부산은 전력반도체, 구미는 반도체 소재·부품을 특화 조성하고, 이를 한데 묶어 반도체 벨트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기존 메모리 중심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 AI용 고성능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첨단 패키징을 차세대 승부처로 제시하고 있다.

고성능 반도체 제조의 핵심기술인 ‘반도체 첨단패키징’은 반도체 칩을 단순 포장하는 단계가 아닌 여러 칩을 하나의 패키지에 통합해 데이터처리 고속화, 소형화, 저전력화 등 반도체 성능을 극대화하는 기술이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확대에 따라 중요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

이에 첨단 패키징 역량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전남·광주에 투자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정부, 반도체 클러스터 구상...삼성·SK, 생산시설 투자 추진 AI 실증·첨단 패키징 광주·에너지 기반 전남 시너지 ‘기대’

반도체 투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계적 패키징 기업 앰코테크놀로지는 공장이 이미 첨단지구에 자리하고 있으며, 1조원을 들여 증설을 추진 중이다. 통합특별시와 연결되면 산업 연계 범위와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AI 실증과 첨단 패키징 분야에, 전남은 전력 등 에너지와 산업부지, 첨단 소재 기반을 갖췄다.

광주에는 첨단3지구로 중심으로 AI 핵심 자원(국가 AI 데이터센터)과 인프라(실증 장비·AI 반도체)를 집약한 AI 집적단지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광주과학기술원(GIST), 전남대, 인공지능사관학교 등 대학과 연구기관이 반도체와 AI 분야 인재를 지속 배출하고 있다. 반도체가 데이터센터를 가능하게 하고 데이터센터가 다시 반도체를 끌리며 현장에 쌓인 데이터가 다시 학습으로 돌아오는 순환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

전남은 전국 최고 수준 재생에너지 기반과 넓은 산업부지를 활용해 반도체 산업의 기반 인프라를 제공한다.

나산 혁신도시에는 에너지 공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기반의 에너지·인재 양산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

해남·신안·영광은 대규모 해상풍력과 태양광 단지가 있어 전력 확보가 중요한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다.

전남에는 AI 핵심 인프라도 조성 중이다. 해남 솔라시도에는 삼성SDS 컨소시엄이 2030년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를 짓고, 장성 첨단3지구에는 SK·오픈AI 합작 ‘한국형 스타게이트’ 데이터센터와 전남 1호 데이터센터인 26MW급 장성 파인데이 터센터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이다.

통합특별시는 광역 단위로 전국 최대 규모의 산업 부지 확보가 가능하고, 광주 첨단산단과 나주 에너지밸리, 여수국가산단, 대불산단 등을 연계한 초광역 산업벨트 구축이 가능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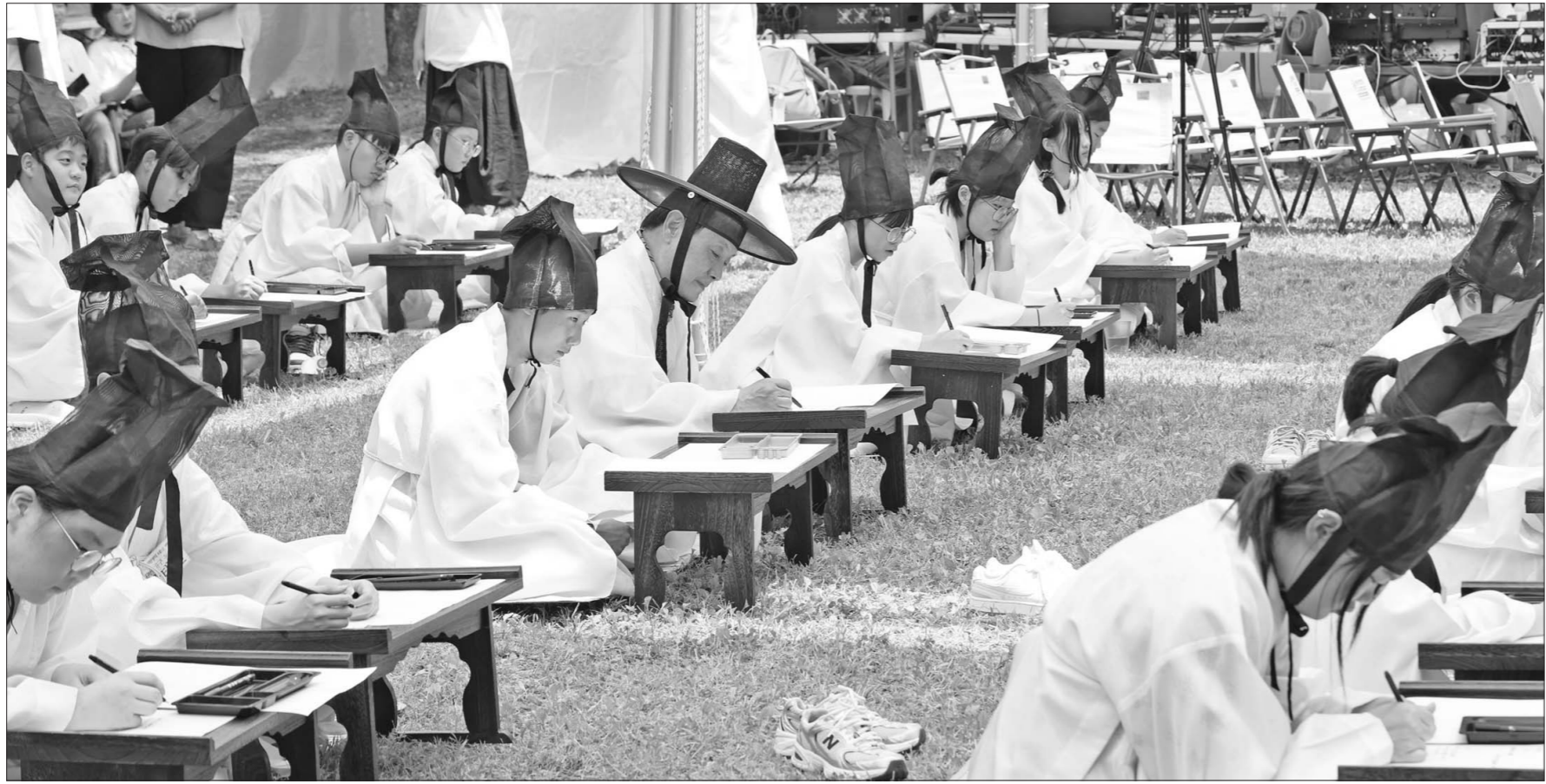
특례를 부여받아 반도체 산업을 연계한 특화단지 지정과 기업 유치에 묶을 수 있고, 교육 특례를 활용해 대학·특성고교-

기업 인재 공급 체계를 만들 수도 있다.

정부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통합특별시의 반도체 구상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2030년까지 420억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실증센터를 구축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 첨단산업 특화단지 등 지자체 법인세 감면, 기반 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하고, GIST-전남대-한전공대를 연계한 반도체 연합공대 구성도 추진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광주 동남갑) 의원은 “광주·전남은 반도체 입지의 기본 조건인 전력, 우수 인재를 모두 갖춘 지역”이라며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 균형발전과 산업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무등생각 청소년 시(詩) 백일장’ ‘생각을 고고, 생각을 커다’를 주제로 지난 13일 광주 동구 무등산 중심사자구 일원에서 열린 제4회 동구 무등산 인문축제에서 일터 동구청장과 청소년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옛 과거시험의 정경 속에서 나만의 고유한 생각을 시로 짓는 시간 ‘무등생각 청소년 시(詩) 백일장’을 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평양 무인기작전’ 尹에 징역 30년 선고

전 대통령 일반이적 헌정사 첫 단죄...김용현 30년·여인형 15년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용현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 각각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일반이적 혐의로 사법부의 단죄를 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5년이 각각 선고됐다.

실제 작전 수행을 지휘한 김용현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장관에게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북한을 자극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심리적으로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 등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국지전 등 무력도발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국가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무인기 투입 작전으로 북한에 우리 전 군드론작전사령관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의 구형량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김

통합시의회, 상임위 11개·예결위 2개 체제

14개 위원회 구성...특별시·교육청 예산 분리 심의

다들답 출범하는 초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가 11개 상임위원회로 구성된다. 수석조원의 예산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반행정과 교육행정 등 2개로 분리 운영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 안건협의체는 최근 광주시의회에서 첫 회의를 갖고 초대 통합의회의 상임위 체제와 예결위 운영 방안, 교섭단체 등록 기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전 조율작업을 진행

했다. 회의는 전체 의원 91명 중 안건협의의 위원으로 위임된 10명(광주권 5, 전남권 5)의 의원 모두가 참석한 가운데 3시간 남짓 이어졌다.

회의 결과, 위원회는 1개(통합) 운영위와 11개 상임위, 2개 특위 등 14개 위원회 체제로 구성하기로 했다.

상임위는 서울의 사례를 준용해 11개로 확정됐다. 11개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행

정안전위, 미래산업위, 농수산업, 기후환경에너지위, 일자리경제위, 도시건설위, 도로교통위, 문화관광체육위, 보건복지위, 교육위 등으로, 위원회당 8~9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 명칭은 가칭으로, 추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예결특위는 방대한 업무와 기관 특성 등을 감안, 통합특별시와 통합교육청으로 나눠 각각 예산결산 심의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로 했다.

예결특위와 운영위의 위원 정수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상임위 위치(소재지)는 집행부인 통합

특별시 조직개편을 지켜본 뒤 의정활동 효율성 등을 고려해 유기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안건협의체는 조만간 목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추후 논의키로 한 정점별 미확정 사항과 함께 상임위원장 선출 방식, 교섭단체 등록기준이 될 최소의원수, 의원실 배치 기준, 필수 자치 법규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큰 흐름에서 광주와 전남권 의원들간 원만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질다”고 밝혔다.

한편, 협의체는 안건별 정점과 검토 사항, 대안 등을 정리한 뒤 오는 24일 당선인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내용을 전체 공유할 예정이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1면 ‘민행배, 반도체’서 계속

그는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의미도 부각했다.

민 당선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은 해방 이후 80년 동안 이어진 이 지역에 대한 차별과 소외, 수탈의 역사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작”이라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갈라놓았던 광주와 전남의 경계를 통합의 힘으로 허물고 새롭게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현장 최고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 균형발전의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행정통합 특례 발굴과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추가 재정 인센티브 확보 등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시, 정부합동평가 2년연속 우수기관 쾌거

특·광역시 2위...정성평가 7개 지표 우수사례 선정

광주시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정성평가 분야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국민이 직접 참여한 국민평가에서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가 우수사례로 뽑히며 정책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정부합동평가’에서 정성평가 16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우수사례에 뽑혀 전국 특·광역시 2위를 차지,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합동평가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수행한 국가위임

사무와 국고보조사업, 주요 국정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 해마다 실시된다.

올해 평가는 목표 달성도를 평가하는 정량지표 91개와 정책 우수사례를 평가하는 정성지표 16개 등 총 107개 지표에 대해 진행됐다.

광주시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의 정성평가에서 총 16개 지표 중 7개 지표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심사에 참여한 국민평가에서도 ‘필요한 순간, 당신의 생

명을 지켜주는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가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에 선정된 정성평가 우수사례는 △청소년이 바꾸는 도시, 광주의 생생 참여 스토리 △기억을 넘어 참여로, 시민이 만드는 보훈 광주 △위기에 강하고 나눔에 진심인 광주, 나눔의 씨앗이 희망의 꽃으로 피어나다 △승용기를 재운 광주! 굿(Good) 다화용기, 굿바이(GoodBye) 1화용품 △광주, 동·서(東西)를 잇고 시·도(市道)를 묶다-초광역 협력의 새로운 표준 △대중교통·자전거·보행도시 광주! 자전거가 중심이다! △꿈 놓고 놓고 키우게! 임신·출산, 광주가 계획책 챙겨드려요~! 등 총 7건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도의회 추정 통과...통합특별시 준비 ‘속도’

전남도·도교육청 추경예산안 본회의 의결

전남도의회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경정예산안을 의결하며 통합 이후 행정 안정화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의회(회장 김태균)는 지난 12일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전남도 및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전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474억원이 증액된 13조5870억원,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5010억원이 증액된 4조9420억원 규모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사업으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855억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112억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추진 38억원 등이 반영됐으며, 도교육청 예산에는 교육발전특구 운영 238억원과 교육행정 통합 준비 예산 17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태균 의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열리는 마지막 회기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안건을 살펴주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행정통합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도민의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담겨 있다”며 “재정 지원이 적기에 이뤄져야 행정통합이 순조롭게 안착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기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시, 이동노동자 ‘폭염 쉼터’ 37곳 운영

폭염대비 생수·안전용품 지원

광주시는 배달, 대리, 택배,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이동노동자들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을 위해 ‘이동노동자 쉼터’ 37곳을 운영한다.

시는 지난 2023년부터 시청사를 비롯해 접근성이 좋은 광주시 산하기관, 지하철역 등 기존 공공시설 34곳을 활용해 ‘공공쉼터’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각 쉼터에는 시원한 냉방시설과 화장실, 휴대폰 충전 서비스, 무선인터넷(Wi-Fi)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이동노동자라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또 폭염대책 기간 이동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폭염 대비 안전용품을 지원하고, 온열질환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중심의 폭염 대응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